

□ 정부시책 및 동향 □

산업자원부, 수출중소 지원 '내실화' 주력

산업자원부는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해 내년 500개 업체를 선정,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조환익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11명의 수출지원센터장, 수출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함께 '수출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지원센터가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자부는 올해 1천개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을 내년부터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내실화해 500개 업체를 엄선, 집중 지원키로 했다. 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위해 배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 39억 3600만원, 퇴직인력활용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46억원에서 내년에 21억원 규모로 축소된 대신 중소기업수출기업화를 위해 10억원이 새롭게 배정됐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대상 선정과 관련, 기존의 수출지원 대상업체 중 내수기업이나 기술력이 뒷받침되는 유망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선정한 수출유망기업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설립연도 2년 이상

인 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수출실적 300만달러 이하 혹은 매출액 중 수출액 70%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져 수출의지가 없는 중소기업 조차 지원받는 불공정한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 수출인큐베이터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지원센터 파견기관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며 수출지원업무도 무역금융, 수출보험 등 업계의 수요가 있고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의 내년도 수출지원예산 157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선정 기업에 우선 지원된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거나 내년 3월 선보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이버 실크로드 2000'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유관 기관들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파견자들에게 관련 업무를 단독 처리할 수 있는 전결권을 확대, 부여하고 전체 11개 지원센터에 대한 실적을 연도별, 분기별로 평가해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수출지원센터가 그 동안 단순 창구 역

할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신규 벤처 기업을 집중 발굴, 수출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무역투자실장 주제로 수출지원센터

장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무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수출지원센터를 순회 방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 무역기반조성 388억 배정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조888억원, 무역기반조성을 위해서는 388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지난 2일 산업자원부는 올해 4조1213억원보다 1166억원 줄어든 4조4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했다. 산자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을 대폭 축소, 내년도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밝혔다. 산업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9238억원보다 17.9% 증가한 1조888억원이며 특히 기술중심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산업기술자금으로 7907억원이 배정됐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입유발 효과가 높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위해 40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확보했다. 무역기반조성

사업의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체제하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무역전시장 건립 예산이 올해 50억원에서 내년에는 22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예산과 에너지기술개발예산이 각각 2220억원, 500억원 배정됐다. 이밖에 IMF 외환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수출보험기금의 경우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3천억원을 배정했으며 한일 수퍼 엑스포 사업예산도 80억원으로 10배 늘렸다. 산자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 지식과 기술의 새 천년에 대비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자원부, 국제기준 '표준전구' 개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주덕영)은 국내 조명기술의 선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에 적합한 조명용 표준전구를 개발, 60여 조명기구 생산업체에 소요량 전량을 무상으로 보급기로 했다.

표준전구는 조명램프의 밝기(광속)를 정확히 측정, 조명기구를 국제표준에 따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전구의 사용수명이 100시간 내외로 짧은데다 개당 80만원 상당으로 고가여서 대부분의 업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표준전구를 사용하지 않는 조명업체의 경우 자체의 조명기준이 서로 달라 제품간 품질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국제표준에도 부적합해 해외수출의 경우 반품 등 클레임이 많았

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표준전구를 보급, 조명기구의 표준화를 확립, 품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표준원은 특수유리구 처리 및 차열판 등을 사용, 광원이 안정되고 광속 측정이 정밀한 60W용과 100W용 표준전구 2종을 개발, 금년 중 60여 조명기구 생산업체에 표준전구와 측정기술을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표준전구 개발·보급으로 국내 조명기구의 품질이 균일화되고 생산기술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표준원 전자정보과 02-509-7338)

산업자원부, '기술매매시장' 12월에 선다

기술을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기술거래소가 12월중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기술이전촉진법의 후속대책으로 민·관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특별법인 '한국기술거래소'(가칭)를 12월초 설립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기술거래소 위치는 국내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서울 양재동·포이동 등 벤처기업단지 인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6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술거래소에 대한 정부와 벤처기업·창투

사·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비율은 49대 51을 원칙으로 하되 2005년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술거래소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진흥원 등 기존의 17개 기술거래기관에 등록된 기술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기술을 등록받아 증권거래소와 같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팔 수 있도록 거래를 알선해 준다.

또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도 사고 팔 수 있다.

산자부는 기술거래소내에 40~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 시장에 나온 기술에 대한 가치나 사업성을 주식값처럼 가격을 고시해 매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거래소와 기술 공급자·수요자 중간에 기술전

문중개인(브로커)인 '기술거래사' 제도를 도입,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가 이들 브로커를 통해 기술을 거래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이 거래소를 통해 2005년까지 2만건의 기술을 등록시켜 연간 2천건 이상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산업자원부·財界, “난공불락 日시장 뚫겠다”

「엔고호기를 맞아 일본시장을 뚫어라」 정부와 재계가 엔고르 수출확대의 유리한 기회를 맞고 있는 일본시장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관 합동으로 품목별 수출협회를 구성하고, 수출촉진단 파견, 일본어 전용 인터넷사이트 개설 및 인터넷 무역지원,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에 주력하고 있다.

난공불락의 일본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제품으로 선정된 품목은 실버산업, 전력기자재, 건축자재 등 3종류, 실버산업 일본은 세계최고의 고령화 국가(64세이상인 전체인구의 4분의 1)로 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9.4%대, 2010년엔 230억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보행차, 보행기, 지팡이, 리프트, 간호용 침대, 보

청기, 입욕보조용구 등 17개 품목이 유망하다. 산자부는 실버산업의 대일수출 촉진을 위해 실비용품 수출협회를 구성하고 정부간 또는 시험검사기관간 승인·검사 및 인증획득(JIS, SG마크)을 위한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추진할 계획.

전력기자재 일본의 전력기자재 시장은 연간 3조6,000억엔 전력기자재중 퓨우즈, 개폐기 등 주요품목의 수입규모('98년)도 29억9,600만달러에 달했다. 일본은 전력요금 규제완화와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조달 확대 등으로 올 들어 전력기자재의 수출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퓨우즈, 개폐기, 콘넥트, 배전반, 자동제어반, 전선, 광섬유케이블 등을 집중공략할 만하다.

중소기업청, '정보화 경영' 인증제 도입

중소기업 정보화경영체제에 대한 인증제도가 내년 7월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정보화 확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화시스템에 대해 인증을 해주는 정보화 경영체제 인증제도를 2000년 7월부터 국내에 도입, 운영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우선 중소기업의 정보화방침 수립, 정보화인식, 정보화 설비관리 등 중소기업 경영전반에 걸친 정보화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 인증기본계획을 마련했다.

또 정보화경영 인증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올해말까지 정보화경영시스템 표준안 마련과 함께 100명의 심사원을 양성할 수 있는 심사원 양성프로그램을 개발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를 토대로 내년초에 시험인증 3~5개 기관과 약 20개 중소기업을 모집해 표준안 검증과 심사원 경험확보를 위한 시험인증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 후 내년 7월부터 공식인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임대공장 中企 자립 지원한다

앞으로 임대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별도 공장을 설립해 독립하면 창업지원법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임대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도 창업한지 5년 이내이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대공장등록 사업자가 공장을 설

립하기 위해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법'에 의해 일반공장 설립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에 따라 임대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까다로운 공장설립절차를 적용받는데다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농지·산림지역에서 토지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산림전용부담금을 50% 감면받고 개발부담금은 전액 면제된다.

생산기술연구원, 연구비 전액 생산기술연구비로 출원

■ 기업화 전액지원 사업

생기원은 연구비 투자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한해 연구비 전액을 생산기술연구비로 출원, 애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을 비롯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이다. 올해 지원업체는 이미 선정된 상태. 내년에는 4월경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5개 정도의 업체를 선별, 10억원 규모의 재정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업체들이 사업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서류심사형식으로 치루는 1차 심사와 연구책임자가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질의하는 2차 구두심사를 통과한 업체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기술개발을 전액 지원하긴 하지만 기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기술개발이 끝날 경우 연구결과로 발생한 노하우 및 산업재산권은 생기원의 소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참여기관에서 직접연구비 집행액의 50%를 정액기술료로 상환한 경우 노하우 및 산업재산권 등의 전용실시권을 7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정액기술료는 최장 3년 균등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국외 전용실시권은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 기업화 일부지원 사업

국내 중소기업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다. 연중 수시로 모집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생기원에 문의할 수 있다. 이 지원사업은 생기원이 총연구비의 50%까지 지원한다. 생산기술연구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절반의 연구비만 충당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내년에는 30억원 정도를 이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50개 이상의 업체들을 선정,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심의과정은 '기업화 전액지원사업'과 같다. 심의를 통과한 업체는 연구과제당 연간 1억원씩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업체는 연구비 전액을 협약체결시 납부해야 하지만 분납도 가능하다. 협약체결시 선금금으로 30% 이상을, 중도금은 50% 해당액을 연구기간 3개월 경과 이전에, 잔금은 연구기간 종료 이전에 결제하면 된다.

사업화가 되면 연구결과에 따르는 노하우 및 산업재산권은 생기원 명의가 되지만 참여

기업이 국내전용 실시권을 7년동안 가질 수 있도록 보장받는다. 대신 매출에 따라 생기와 협의된 경상기술료를 업체는 부담해야 한다.

■ 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국내 미개척 분야의 기술을 광범위하게 발굴하고 대학의 잠재능력을 생산현장에 접목해 국내 연구인력의 풀(Pool)제를 시도하고 있

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의료기기 개발, 대학병원, 대학, 생기원 등이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내년에는 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다. 연구비는 참여기업이 40% 이상을, 생기원은 60% 미만을 부담한다. 협약체결시 선급금 30% 납부후 6개월내에 잔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문의 : 생기원연구관리과 (0417)5608-071

대전시·산업기술정보원, 세계첨단 과학기술 한자리에

국내 최초로 세계 첨단 과학기술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제1회 WTA 대전 테크노마트를 엑스포공원내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WTA 회장도시인 대전시가 주최하고 산업기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국내 113개, 해외 107개 등 총 220개의 연구기관과 업체가 참가한다.

이 자리에는 전기, 전자, 기계, 금속 등 450여개의 기술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정보통신 63개, 신소재 71개, 환경 21개 등 최근 두각을 보이고 있는 과학기술들이 집결한다.

국내 주재 각국 대사관 및 경제대표부도 직접 참여하며 캐나다 대사관을 비롯 7개 해외 공관이 각국의 기술력과 산업을 홍보하는 자

리를 마련한다. 러시아 경제대표부는 100여개의 러시아 첨단 산업기술 자료를 이번 행사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전문가에 의한 참가기술의 사전분석과 적합한 기술협력 파트너를 찾아 연결해주는 '매치-메이킹'이다. 또 참가기술에 대한 정보는 연말에 개설할 예정인 국내 최초의 사이버 기술거래시장 '사이버 잇 마트(CYBER IT MART)'로 넘어간다.

기술상담은 WTA사무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문의 : (02)962-6211(교 554, 516), 웹사이트 <http://tmwtanet.org>)

▲ 세계과학도시연합(World Technopolls Association)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지난해 9월 대

전시에서 11개국 23개 회원도시로 출범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다. 과학기술을 연계시키고 과학도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 인류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 출범 목적이다. 지난 '96년 11월 9개국 20개 도시 공무원과 학자가 참여한 '세계과학기술도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 WTA의 결성을 합의했다. '97년 6월 10개국

22개 도시 시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구설립의 기본 취지와 운영방향을 담은 WTA 헌장과 WTA의 공동발전에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조직이 결성됐다.

WTA는 유네스코(UNESCO), IASP 등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모색중이며 국제 공동연구, 정보네트워크 구축, 테크노마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